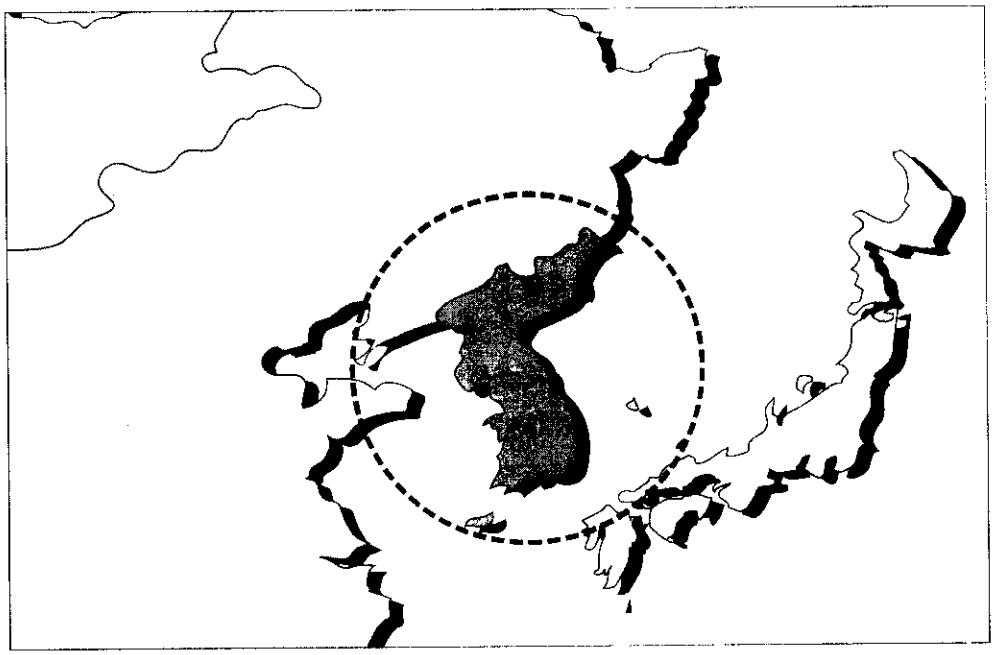
논 단



64.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EU의 역할**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75. **경수로 인력의 북한 체류에 따른 국내법 상의 문제**
제성호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EU의 역할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유럽연합(EU)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첫째,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물론 두만강 유역 경제 개발 같은 국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의 통상 마찰이 고조되지 않도록 시장 개방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북한 지원 및 통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북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패권적인 행동에 대해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 협상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공동체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과 러시아의 극동 지방을 묶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만든 후, ASEAN과 합쳐 동아시아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동북아공동체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체로 다각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의 활성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지역협력체 구성을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공동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집단안전보장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구촌의 세계 각국은 저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기 바쁘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21세기를 맞는 한반도의 비전은 당연히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 그리고 통일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비약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최근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계속된 경제 위기에 더해 최

근에는 잇따른 홍수와 가뭄까지 겹쳐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 흡수될까봐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다. 어렵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 성장을 지탱해온 경제 구조가 시장 개방과 구조 조정의 회오리바람을 맞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떤 형태로 남북 통일이 이뤄지건 한국이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사정이 심각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이같은 변수들은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한반도의 최근 정세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 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끝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전망

최근의 한반도 정세

최근 남북한 관계의 초점은 식량 지원 문제 및 4者회담으로 집약된다.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체제의 생존 가능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1] 북한체제의 돌발적인 붕괴는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급변시키는 엄청난 변화다. 따라서 같은 민족인 한국은 물론 기존 세력 균형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미국, 중국 등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995년 9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한국이 2억 5,635만 달러, 유엔국제적십자 등 국제 기구가 약 2억 5,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2] 이렇게 적지 않은 지원을 했지만 북한 지원 창구의 단일화, 지원된 식량의 분배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를 놓러싸고 남북한간에 적지 않은 불신과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근본 원인을 보는 시각은 남북한간에 더욱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작년과 재작년의 계속된 수해와 올해의 심한 가뭄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남한은 집단농장제에 따른 생산 의욕 상실, 비료, 농약, 트랙터 등 농자재의 공급 부족, 경제력에 비해 지나친 군사비 지출 등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앙배급체계 및 지역간 식량유통체계의 붕괴가 식량난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북한의 1995년도 군사비 지출 56억 달러 가운데 3%만 줄여도 옥수수 100만 톤을 살 수 있으며, 정치 선전비 9억 달러의 1/3만 줄여

1) 한 예로 유엔아동기금은 5살 미만의 북한 어린이 가운데 약 8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때문에 심각한 발육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일보」(1997. 7.9, 9.18) 참조).
2) 국무총리실 자료(1997. 6.27), 남찬순(1997)에서 재인용.

도 옥수수 200만 톤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3] 그러나 체제 유지에 급급한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는 어려우며 당분간은 해외 원조로 버텨나갈 것이 분명해보인다.

지난 1996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발표 형식으로 제안된 4者회담의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보장 아래 한반도 긴장 대입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일이고 한국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오래 전부터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으나 북한은 아직 미국과 국교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인 듯하다. 따라서 4者회담의 제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참석하는 3者설명회조차 두 차례나 연기했으며, 결국 지난 3월 5일 설명회가 열렸지만 동시에 북미준고위급회담이라는 북한과 미국의 또 다른 접촉 창구가 개설됐다. 북한은 4者회담을 식량 지원 및 미국과의 접촉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이 그동안 동결해온 자국 내의 북한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북한과 미국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북한의 식량난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을 제안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4]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최근에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펴며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최대 관심 사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통한 부국강병이며,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봉쇄 정책을 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소극적으로는 고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4者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불투명한 한반도 전망

지난 90년대초 옛 소비에트연방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북한체제의 붕괴 및 한반도 통일이 임박했다는 성급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기대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북한은 남한에 흡수 통일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 의식 때문에 더욱 폐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가운데 잇따른 수해와 가

3) 통일원 자료(1997. 7.1), 남찬순(1997)에서 재인용.
4) 문화일보(1997. 9.18) 참조.

몸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더욱 심각한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은 북한 정권은 안으로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개혁 조치를 허용하고 밖으로는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한 원조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불안정을 막기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연착륙(soft land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유지 및 정권 보안을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필요한 외부 원조를 받되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지속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정권으로서는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염려가 있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 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남북 대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갈등을 빚는 등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복잡한 국내 사정 및 서로간의 불신과 견제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이므로, 이 지역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유럽연합(EU)이 북한 지원 및 동북아협력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및 동북아와 EU의 협력 필요성

한국과 유럽의 비전 및 보완 관계

21세기를 맞는 한국과 유럽은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통합 또는 통일 그리고 세계화'라는 비전이다. 한국은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편, 임박한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즉, 경제의 세계화를 통한 효율 향상 및 경쟁력 강화만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해주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제력이 있어야 남북 통일에 따르는 엄청난 통일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통화 통합 더 나아가 정치·안보 통합까지 추구하는 통합의 질적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의 EU 가입을 통한 통합의 양적 확대이다. 그리고 이같은 통합의 질적 강화 및 양적 확대를 통해서만이 시장 확대와 실업 해소 나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 통일과 유럽 통합은 모두 2차대전 이후 형성됐던 냉전체제의 틀을 깨뜨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한반도 분단은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냉

전체제의 산물로서 한국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긴장 해소와 협력 증진 나아가 동아시아, 유럽,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세계 정치·경제 재편을 가시화하는 결정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EU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동아시아는 세계 최고 경제 성장 및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중국, 일본 및 ASEAN에 쏠렸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갖는 큰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1995년을 기준으로한국은 EU의 8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5] 따라서 유럽의 첨단 기술과 자본 그리고 한국의 제조 및 시공 기술과 숙련 노동력을 결합하여 역내 진출을 꾀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상승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유럽에서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유럽과의 경제 협력은 아직까지 절대적인 이 지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균형있는 대외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협력 필요성

정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냉전체제의 붕괴로 오늘날 세계 경제는 갈수록 밀접히 연관되어 말 그대로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커다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맞고 있다. 즉, 각국 정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자국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 예산의 팽창 및 누적된 재정 적자 등 구조 조정의 압력에 직면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기업과 실업 해소를 꾀하는 정부 사이에 일정한 갈등과 긴장 관계가 지속되게 되었다. 이 같은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타협이 바로 지역경제공동체이다.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시장을 결성함으로써 역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고용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역내 경제권에서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측의 욕구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다극화 및 세계화된 기업과 국내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에 직면한 각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 지역경제공동체이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생산 및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동아시아, 북미 3개 지역에는 이미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괄하는 지역경제공동체가 결성돼 있으며,

5) 지난 1996년 기준으로 한국의 對EU 수출은 153억 2,500만 달러, 對EU 수입은 212억 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15 개국의 회원국이 가입한 유럽연합(Europe Union: EU), 북아메리카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가입한 북미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 동남아시아 9 개 회원국이 가입한 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 ASEAN), 남아메리카 지역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가입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취약하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불안은 최근 태국 바트화의 폭락을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 현상이나 캄보디아에서 내전이 재발한 사실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싼 영토 분쟁,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 등 적지 않은 갈등 및 주도권 쟁탈전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치·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강력한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 현재 ASEAN과 APEC이 있지만 ASEAN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 국이 빠져 경제 규모나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APEC은 북미주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 범위가 넓고 회원국들이 이질적이며 미국의 영향력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의 동북아 3 국(나아가 러시아의 극동 지방) 등을 포괄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정치·경제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1992년 12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EAEG)의 결성을 제의한 바 있지만 미국의 견제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EU의 역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및 투자 확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통일을 위해 EU가 할 수 있는 첫번째 역할은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EU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물론 두만강 유역 경제개발과 같은 국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및 체제 붕괴 가능성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 및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식량난을 포함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KEDO), 식량 지원, 4者회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으며 한국과의 직접 대화 및 협상을 꺼리기 때문에 한국의 지

원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 회복 및 경제 지원을 교섭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반발 및 기존의 세력 균형을 고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EU는 북한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장점을 살려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나아가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EU가 최근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는 대신, 일본이 보스니아 재건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세계 각 지역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9월 말에 개발 중인 서해 油田의 구체적인 위치와 그동안의 탐사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 관계자는 유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을 원유로 상환하는 합작 투자 방식을 통해 세부 물리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스탠톤그룹 등 몇몇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스탠톤그룹은 미국 재무성의 승인 아래 1,300만 달러를 투자해 북한과 합작으로 나진·선봉지구에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승리화학정유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이다. 만일 북한의 유전 개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은 물론 정치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의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는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EU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본다. 이 점과 관련해 한국 주재 유럽 기업인들의 모임인 주한EU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올 여름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투자 상담을 한 것도 북한의 유전 개발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3~4 년 동안 통화 위기의 여파로 인해 불경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확대는 유럽 기업에도 상당히 매력있는 투자 기회로 여겨질 것이다.

만일 EU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 확대가 진전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남북 경협의 확대는 구조 조정의 진통 속에서 과잉 설비때문에 골치를 썩일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 기대될 것이다.

한국과의 통상 마찰 완화

단기적으로 EU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한국과의 통상 마찰이 고조되지 않도록 시장 개방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 지원 및 통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

제가 흔들리면 북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KEDO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6] 게다가 올해 들어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한 데다, 지난 7월에는 3대 완성차 조립 업체인 기아자동차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이 누적돼 금융·외환 위기가 심화됐고, 결국 1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한국 경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같다. 따라서 EU는 한국의 산업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등의 시장 개방 협상에 緩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EU는 슈퍼301조를 발동한 미국과 함께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폭 확대 및 과소비 자제 운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酒稅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미국, EU, 캐나다 등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과 EU의 한국산 컬러 TV나 반도체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캐나다의 한국산 油井用 鋼管에 대한 반덤핑 판정 등의 경우는 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과 EU의 통상 마찰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EU는 한국산 VTR,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등과 굴삭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무혐의처리했으며, 한국은 EU측이 요구한 酒稅率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패권적인 행동에 대해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 협상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국에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담배 판매를 적극 추진하는가 하면, 자국산 농산물, 무기 등의 판매를 위해 半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걸핏하면 슈퍼301조의 발동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은 쿠바, 이란, 리비아 등과 거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자국법을 외국 기업에도 무차별하게 적용하려 해 EU를 중심으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EU는 WTO의 통신 및 금융 서비스 협상에서 긴밀히 협조한 경험을 살려 미국의 압력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공동체의 결성 촉진

동북아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제

6) 최근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며, 미국은 당초에 약속했던 중유 공급마저 의회에서의 논란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

적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도 뚜렷하다. 첫째, 동북아공동체를 구성하는 대상 지역 - 한국, 북한, 일본, 몽고, 러시아의 극동 및 연해주 지방, 중국의 동북 3省 - 사이에는 매우 강한 경제적 잠재력 및 보완 관계가 있다. 러시아 극동 지방에는 석유, 석탄, 천연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주석, 형석, 텅스텐 등 70종 이상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낙엽송, 가문비나무, 적송 등과 같은 삼림 자원 그리고 연어, 명태, 청어 등의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 지방의 常住 인구 수는 1,000만 명 이하여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며 자원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도 없다. 따라서 중국 동북 지방의 1억 명에 이르는 노동력을 동원하고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유럽연합처럼 수평적인 분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지만, 대신 수직적인 분업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는 셈이다.

둘째, 동북아공동체는 비록 자연 발생적인 지역 협력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역내 인구가 3억 명, 국내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DP) 합계가 5조 달러를 훨씬 넘을 정도로 시장 규모도 크다. 게다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국,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맹렬히 성장하는 거대한 중국, 엄청난 자원과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산업이 취약한 러시아 극동 지방 등의 다양한 계층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오래 전부터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계속해 왔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지난 1988년 이후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지만,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들이 있다. 첫째는 동북아공동체가 역내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지역간의 경제 협력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 경제 영역(Natural Economic Territories: NETs)이라는 점이다. 비록 역내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발달 수준이 크게 다르고 시장 경제의 성숙 정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은 요원한 실정이다.

둘째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간에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긴장 지속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남한 또는 북한과 일본 사이의 경제 협력이

근본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이밖에 일본과 러시아간에도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놀라운 정도로 빨리 커져버린 경제 협력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두 나라는 대만 문제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는 무역수지 불균형,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연장해주지말라는 미국 의회의 압력에 시달리곤 한다. 아울러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팽창시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협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경제를 뒤흔든 금융·외환 위기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극적으로 확인해주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구성은 여전히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이 없다. 한 예로, 동아시아의 통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아시아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 AMF)의 창설을 논의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AMF는 IMF의 보조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통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월에 ASEAN과 동북아 3국의 정상이 모일 때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금융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걱정되지만 중국 가입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1,300억 달러나 되는 데다 동시에 홍콩을 인수해 동아시아 금융 시장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무역 산업 투자 등도 긴밀하다. 일본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수직 분업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대만 등의 수평 분업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과 러시아의 극동 지방을 묶는 동북아경제공동체(North 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를 만든 뒤 ASEAN과 합쳐 동아시아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방식은 유럽 통합 초창기에 EEC가 EFTA 회원국을 흡수했던 방식과 같다. 동북아공동체의 구성은 교역 증진, 경제 협력 등은 물론 EU의 경우처럼 집단안정보장기구로 발전해 역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통일에 도움이 되며, 반대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공동체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오랫동안 유럽 대륙에서 긴장과

불화의 당사자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이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 EC)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EU를 태동시킨 역사적인 사실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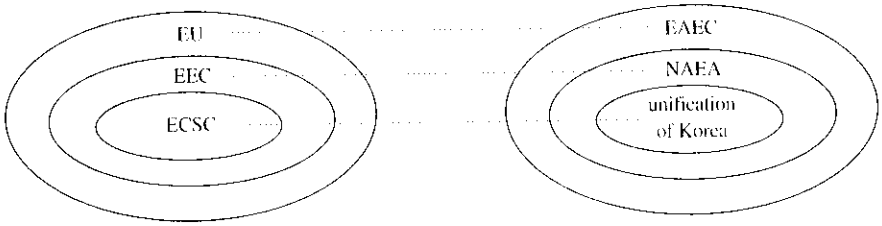
역으로 동북아공동체가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 내지는 한국 통일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EEC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처음부터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참여한 국제 기구로 출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동북아공동체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체로 다각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의 활성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지역협력체 구성을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동북아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로 확대된 뒤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집단안정보장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긴장 해소 및 화해를 뒷받침하고 보장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전역의 긴장 완화를 다져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집단 안전 보장 기구에는 EU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직접인 이해 관계가 있지만, 이들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이 EU가 제3자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統

참고 문헌

남찬순(1997. 9), "동북아의 안정 보장", 제5차 한국·유럽연합 언론인 세미나, 포르투칼 리스본.

신영섭(1997. 9),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Europe towards 21st Century," 제5차 한국·유럽연합 언론인 세미나, 포르투칼 리스본.

국내 각 일간지 기사.

〈그림〉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간의 대응 관계